

# 충북... ‘강호축’ 개발로 미래 먹거리 창출, 핵심은 교통 인프라 확충

-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제안, 투자 자원 확보가 관건 -

이 광 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leekp@cerik.re.kr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3선에 도전한 이시종 후보는 61.15%를 득표하며 충청북도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이시종 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인프라 관련 공약으로 ‘①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발전시켜 충북 미래 먹거리 창출’, ‘② 중부고속도로 확장·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③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 만들기’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시종 도지사의 인프라 관련 공약과 충북의 인프라 실태를 분석하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이시종 지사, 미래 먹거리로 강호축 개발 공약

이시종 도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5대 공약 중 하나로 ‘강호축’ 개발을 내세웠다.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하고 낙후된 강원~충청~호남을 개발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시종 지사가 제시한 강호축 개발 공약의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시종 지사는 강호축 개발 공약의 이행을 위해 충북의 교통 및 산업단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통 분야는 철도 및 공항

<표 1> 강호축 발전 공약의 세부 내용

공약명	강호축을 발전시켜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부축에 대응하여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발전시켜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li> <li>충북선 철도 고속화 연결로 북한과 유라시아(TSR)까지 진출</li> <li>강호축 해당 지역의 전략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접목으로 미래 산업 선도</li> <li>강호축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문화·관광·휴양 등)</li> </ul>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청주공항~천안 간 복선 전철</li> <li>오송 국가3산업단지 등 도내 전체 37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li> <li>백두대간 민주지산~속리산~소백산 종주 생태·문화 탐방로·국민쉼터 조성</li> <li>청주공항을 중부권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기지 항공사 설립 및 노선 다변화</li> </ul>
이행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부터 단계적 추진</li> </ul>
자원조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li> </ul>

에 대해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청주공항~천안 간 복선전철 사업’,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과 관련해서는 ‘오송 국가3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도내 전체 37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였다.

충북 내 철도의 경우 총 5개 노선(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4개)이 통과하고 2011년 오송역이 개통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의 연계, 충남과의 지역 연계(천안 등), 충북 내 철도 고속화, 공항 연계 노선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공항의 경우 청주국제공항이 2015년 연간 이용객 수 20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아직 중부권의 거점 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미약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종 지사가 제시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청주공항~천안 간 복선전철 사업은 충북과 타 지역 간 연결성을 증대

시키고, 충북과 인접한 타 지역민의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활주로 길이를 2,744m에서 3,200m로 확장하는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사업’은 국제노선의 다변화를 통해 향후 청주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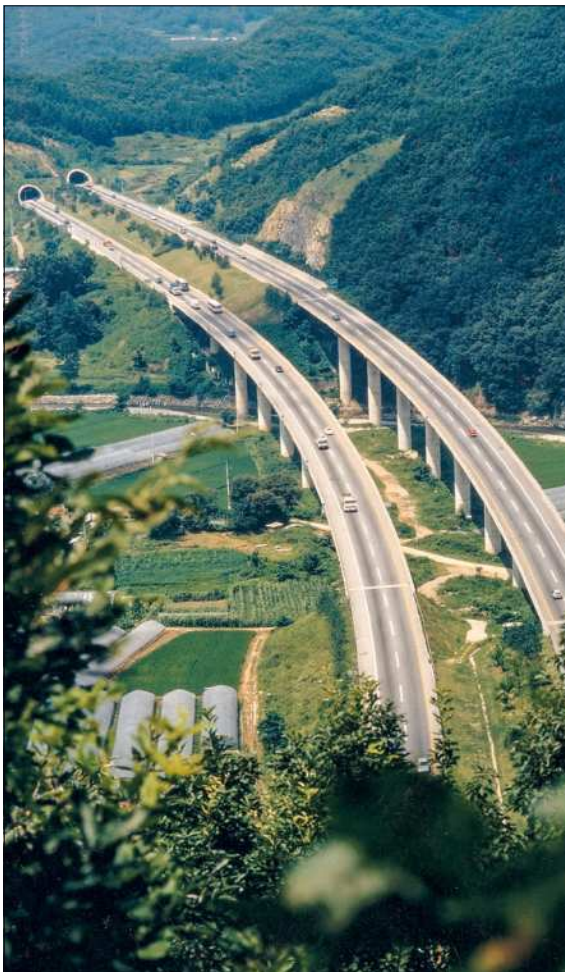
한편,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53조원으로 도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강원, 전북, 제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시종 지사가 제안한 오송 국가3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향후 충북의 GRDP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순기능이 기대되는 강호축 개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국가 계획에 강호축 의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공약의 세부 내용

공약명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의 내륙지역 발전과 균형 개발 촉진 및 수도권과 상생 발전 (교통량의 효율적 분산· 교통 수송 처리 능력 제고)</li> <li>• 충북의 남·북부권 연결로 도내 전 지역의 반나절 생활권 실현</li> </ul>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단계별 조기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 및 예산이 확보(20억원)된 서청주~증평 구간 조기 완공 및 경제성, 예비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기간 단축</li> <li>- 중부고속도로 78.5km(4차로 → 6차로) 확장 및 도로 정비 (남이JC~오창IC~진천IC~음성IC~호법JC 구간 조기 확장)</li> </ul> </li> <li>•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 4개 차로, 90km/h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 완공</li> <li>- 2018년까지 1,493억원 확보(총사업비의 20.7%), 1공구 준공 예정인 202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144억원 소요 예상(L=57.6km, 신설 44.4km, 기존 국도 개량 13.2km)</li> </ul> </li> </ul>
이행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2018~2028년)</li> <li>•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2018~2024년)</li> </ul>
재원조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li> </ul>

**교통 인프라 확대로 충청 내륙지역 개발**

중부고속도로는 1987년 개통 후 충북 전체 수출액의 95%, 지역내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청주, 진천, 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 구간에서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청주~대소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6만 6,779대로 6차선 확장 기준인 하루 교통량 5만 1,300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정체 지표 D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



이시종 지사는 중부고속도로의 확장 공약과 함께 충청 내륙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목표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 공약을 제시하였다.

시종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고 증평IC~진천터널 종료 구간을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서청주IC~증평IC 구간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은 수송 처리 능력의 제고를 통해 충북의 내륙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권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켜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지사는 중부고속도로의 확장 공약과 함께 충청 내륙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목표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 공약을 제시하였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통해 청주와 접경한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청주~증평~음성~충주 구간의 시가지화, 많은 신호등 및 접속 도로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과속·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에 준하는 주행 속도와 도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충북의 남·북부권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진천·음성 등 충청 내륙지역에 산재한 산업단지의 물류 수요에 대처하여 충북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2의 제천 참사는 없다”... 안전한 충북 만들기**

이시종 지사는 앞선 충북의 교통 인프라 확장 공약 외,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 만들기’ 공약을 제시하였다. 2017년 7월 16일 청주 지역은 290.1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기준 공공시설 415억원, 사유시설 131억 6,000만원 등 모두 546억 6,000만원 수준의 홍수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12월 21일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

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제안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예보 시스템 강화', '도민 재난안전망 구축', '취약 지역의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먹거리 안전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 확대 보급'이라는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세부 목표 중 '도민 재난안전망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자동 가스 잠금장치(타이머 콕) 보급, 소방 인력·장비 확대(소방통합청사 신축, 제천 하소동 화재현장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충북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이제 이시종 지사가 제시한 5대 공약 중 인프라의 발전 및 제고와 연관성이 높은 부분들을 살펴 보겠다.

공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 투자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충북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의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충북의 1인당 SOC 예산은 71만 8,000원으로 16개 시·도 평균인 72만 5,000원을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중앙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 마련을 통해 인프라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의 효율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세 총량 증대와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충북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의 권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사업 주체 및 실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신뢰 구축이 선행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프라 투자 추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리 조직의 확보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충북의 경우, 충북연구원 내 인프라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주무 부처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북의 공공투자분석센터는 향후 공공 투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충북 내 건설공사 중 충북 지역 소재 업체의 최근 수주 실적은 전국 평균(약 39.2%)을 다소 상회하는 약 40% 수준이나 2016년 지역 내 공사 중 해당 지역 소재 업체의 기성 비중을 보면, 충북은 33.5%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6.0%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비의 정상화 및 불공정 관행의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형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충북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ND**